

일단 파국 모면 ... “한달 뒤에 보자”

■ 국회 미디어법 쟁점 타결 ... 향후 전망

내달 추경안 놓고 여야 충돌 예상 균형발전법 오늘 처리 ... 결과 주목

2일 여야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와 관련, 100일 동안 논의한 이후 표결 처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파국으로 치닫던 국회에 극적으로 정상화됐다. 특히, 여야는 ‘포틀러원(F1)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F1 지원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내용=여야는 우선 미디어 관련 6개 쟁점법안 가운데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회의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직권상정의 초읽기에 몰리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한 측면이 없지 않아 여야간의 불신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미디어 관련 법안들이 쟁점이 되면서 기타 쟁점 법안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부의 내용도 예상되고 있다.

이들 반영하듯 민주당 비주류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오는 4월 추경예산 처리를 두고 여야간의 극심한 충돌을 예상하는 목소리와 함께 미디어 관련법 처리도 세부과정에 대한 의견조율이 매끄럽게 끝난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추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역 현안 법안=여야는 미디어 관련법 합의 도출 과정에서 F1 지원법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 하는 등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현실화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국제경기지원특위 조영택 민주당 간사는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 과연 F1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5+2 광역경제권 설정’ 문제가 매듭 지어지지 않아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F1 지원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는 국제경기지원특위 및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통과해

여야는 지난 1일 합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법안명을 유지하고 5+2 광역경제권 설정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되 국회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를 결치는 한편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시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일 오후 미디어 관련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극적 타결이 이뤄진 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원내대표 회의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정국 경색 책임 면해 큰 성과” 野 “미디어법 2월처리 저지 성공”

■ 정치권 이해득실은

여야는 2일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정치권에 쏟아질 국민적 비난은 피하게 됐다. 여당은 향후 정국 경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고 야당은 최대 쟁점 법안인 미디어 관련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일단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또 여야의 중재를 이끈 김형오 국회의장은 막판까지 인내심을 갖고 여야 협상을 이끌면서 다시 한번 정치력을 입증받았다는 평가다.

김 의장은 2일 오후 1시30분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한나라당이 우선 처리를 요구한 미디어법 3개를 포함해 15개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오후 4시로 연기한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직권상정 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직후 민주당에선 미디어법과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를 100일 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한다는 극적 양보안을 내놔고 한나라당이 수용 입장을 정하며 대표 회담 및 원내대표 회담을 거쳐 숨겨진 합의가 이뤄졌다.

미를 두며 “실질적으로 관정승을 거뒀다”고 자평하는 분위기가. 한나라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 등에 대해 연말까지 상임위 상정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1차 입법 전행 후유증으로 여권 내 주류 세력으로부터 퇴진 압박까지 받았던 한나라당 지도부 역시 기사화되는 분위기다.

김 의장은 2일 오후 1시30분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한나라당이 우선 처리를 요구한 미디어법 3개를 포함해 15개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오후 4시로 연기한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직권상정 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직후 민주당에선 미디어법과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를 100일 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한다는 극적 양보안을 내놔고 한나라당이 수용 입장을 정하며 대표 회담 및 원내대표 회담을 거쳐 숨겨진 합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이번에도 막판에 나서 단 한마디의 말로 협상의 흐름을 바꿔버려 한국 정치권에서 가진 영향력을 보여줬다. 박 전 대표는 2일 오전 본회의장을 찾아 미디어법 직권상정 등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인 의원들에게 “한나라당이 그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을 많이 했다”고 평가한 뒤 미디어법 처리시한 명기와 관련해선 “야당이 그 정도는 합의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여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이 이후 한나라당은 강경한 반응이 줄어든 것으로 민주당은 처리 시한을 못박는 막판 협상 카드를 제시했다. 외형적으로는 박 전 대표의 힘에 굴복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 표결 처리 시한을 못박았다는 데 큰 의

미주 지도부는 이번 합의가 완성은 아니지만 실패도 아니라는 반응이다. 논의 기간을 ‘4개월 뒤’에서 ‘100일간’으로 단축했지만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표결처리한다’는 내용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기존 중재안과 큰 차이 없다는 주장이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MB 약법 직권상정을 막고, 미디어법 논의의 및 처리시한을 벌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무력화리만큼 한나라당의 의견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마라톤 협상→의장 중재→표결안 수정 제의→ 합의

■ 여야 25시간 롤러코스터 협상끝 타결

여야의 극적인 협상 타결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예고된 2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의 개최를 30분 남겨놓고 이뤄졌다. 이때까지 여야는 1박2일 25시간의 숨막히는 협상을 벌였다.

휴일인 1일 원내대표단 협상이 벽에 부딪히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오후 3시 회담을 갖고 접점 찾기에 나섰다. 이때부터 양측은 무려 7차례, 총 25시간의

기간간 릴레이 협상을 지속했다. 협상 시작 단계에서는 신중전만 치열할 뿐 성과는 없었다. 1일 오후 3시, 오후 6시, 밤 9시로 이어진 세 차례의 여야 대표 회담은 무위로 끝났다.

여야가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1일 밤 10시30분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심야 회담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2일 새벽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그동안의 협상은 무위로 돌아갔다. 특히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시내 모 호텔에서 김 의장과 비공개 회담 직후 “더 이상 합의는 없다”고 선언하면서 파국이 예견됐다.

김 의장도 중재에서 손을 떼고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방송법을 비롯한 15개 쟁점법안의 심사기간을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직권상정을 예고

한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민주당은 ‘미디어법안의 직권상정 처리’를 막기 위해 마지막 협상카드를 꺼냈다. 사회적 논의기구에 의한 미디어법 논의를 ‘4개월’에서 ‘100일’로 줄이고, ‘표결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이 ‘표결 처리’는 한나라당의 요구였다. 이때부터 여야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오후 2시40분 홍준표, 원혜영 원내대표의 회담에 이어 3시 20분에 박희태, 정세균 대표가 잇따라 회담을 갖고 민주당의 제안을 바탕으로 타결을 벌였다. 결국,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였고 박 대표와 정 대표는 오후 3시30분에 밝은 표정으로 회담장을 나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아쉽지만 다행”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운동본부 출범

청와대는 2일 여야가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광복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아쉽지만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법을 제외하고 다른 경제관련 법안들을 조기에 처리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로서도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국회 파행사태를 막게 됐다”는 점에서 일단 합의를 존중한다”면서 “여야가 자당의 입장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시군자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청장협의회·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전국국립대학교교수회 연합회·한국여성유권자연맹·정당공천폐지를 위한 학계모임 등으로 구성된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참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정당공천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생활 정치를 펼치는 지역의 대표 일꾼”이라며 “공천이 곧 당선되어 버리는

현재의 선거제도하에서 주권자인 주민은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정당의 제물과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문화가 건전하게 정착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오는 6월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1천만 서명운동을 비롯해 지역순회 토론회, 정당 지도자 초청 토론회, 국민대회 개최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불황을 이겨내는 방법? 전문자격증 준비!! ★★★

공인중개사 10월 25일 시험

여성 최고의 유망 전문직 아파트 관리소장! **주박관리사 9월 20일 시험**

최강의 교수진 "저자직장" 전원 서울에서 출강! **광주고시학원**

3월 2일 (첫년도 시험)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첨단점 ☎ 971-0002 광주은행점 4층

전국 최고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현장 안명선

경 찰

개강 3월 2일(종합 및 문제풀이)

※합격시스템	1년과정	순경공제	특 제
6개월과정 •2개월 완성3회 반복 학습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화 •수강료 교재 25% D/C	1년과정 •2개월 완성6회 반복 학습 •영어 기본이 인턴 수강생 한화 •수강료 50% D/C 교재 25% D/C	남-1차: 966명 2차: 214명 여-1차: 40명 2차: 47명 101단-1차: 120명 2차: 120명	•전의경 특제 240명 •경찰 행정학과 특제 100명 •경찰 특공대 특제 38명

※ 종합 1개월 : 16만원 · 문제풀이 1개월 : 13만원 · 단과 : 9만원

경 찰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 226-5050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 정확한 합격 예약!! 無等과 만나세요. =

7.9 공무원 對備

9급 직종문제풀이 4주 완성

행교서관감법검마철교보보간복소기 (영어)10기가능직

정행무세사원찰약공정호건호지방술

개 강 소방직

3월 2일(주·아침 6시) (현재예약수중)

서울 372, 부산 82, 대구 42, 인천 277, 광주 115
대전 78, 울산 42, 경기 273, 강원 179, 충북 113
충남 188, 전북 116, 전남 190, 경북 128, 경남 110

www.mdgosl.co.kr ☎ 222-4560

건설면허

- ▶ 건설업 양도 양수
- ▶ 건설업 구조조정(분할 / 합병)
- ▶ 신규취득 / 기업진단

부성 M & A

☎ 02)773-5690~1